‘보육 대란’ 시한폭탄 돌리기 부모·어린이는 안중에 없다

시도교육감 “정부 법적 조치땐 맞대응”

시·도의회, 유치원 예산 심의도 미뤄

정부와 교육청의 누리과정 (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달 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강한 압박성 메시지를 던지자 시·도 교육감들은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하면 교육감들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처하겠다”고 맞받았다.

‘민의’(民義)를 대변한다는 시·도의회는 ‘어린이집이 없으니 유치원도 받지 마라’는 식의 논리만 내세우며 광주·전남교육청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재심의를 미뤄두고 있는 형편이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보육 대란’ 사태가 시한폭탄처럼 초침(秒針)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보이지 않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정부와 시·도 의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시도교육감들을 겁박해 누리과정의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면서 “정부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참석했다.

아울러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10일 이전에 개최할 것과 여·야 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15일 이전에 열 것을 긴급 제안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현격해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광주·전남 교육청이 예산 재심의를 요구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시·도의회의 부정적 기류로 처리 여부가 미지수다. 광주시의회 조영표 의장은 “8일 본회의 때 상정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입장의 변화 추이를 지켜보며 상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명현관 전남도의회 의장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함께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유치원 예산 재심의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유치원업계 사이에서는 이런 가운데 오는 10일 전후로 유치원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업료·급식비·교사 월급 등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 다음 주 학부모들에게 그만큼 신청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無償)으로 실시한다’는 유아교육법(24조)을 위반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셈이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우선 교육청이 책임지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통과시켜 학부모 피해를 줄이면서 시·도와 교육청, 의회가 어린이집 예산 문제 해결책 모색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北 수소탄 핵실험

차원 다른 核 위기…中, 제재 적극 동참할 듯

북한, 또다시 전략적 도발 강행

국제사회 고강도 조치 불가피

북한이 6일 국제사회의 ‘허를 찌르는’ 수소폭탄 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즉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북한이 또다시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면 국제사회가 중대한 추가 조치에 나선다는 것은 이미 앞서 나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고강도 추가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첫 절차는 유엔 안보리의 긴급회의 소집이다.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에 해당하는 수소폭탄 실험 실시가 확인됐기 때문에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회의는 사실상 자동적으로 소집 수순을 밟는다. 러시아 타스통신 등은 익명의 유엔 관계자를 인용해 안보리가 한국시간 7일 오전 1시 긴급회의를 갖는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번 도발을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 규정한 상태로, 현재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이사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1월 안보리 의장국은 우루과이가 맡고 있다. 안보리는 회의에서 1차적으로 언론 성명 등의 형태로 이번 실험을 규탄하는 입장을 내놓은 뒤 본격적인 대북 제재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는 미국과 중국 등 거부권을 쥔 상임이사국 중심으로 이뤄지며 중국의 의견이 실질적 대북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키’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수소폭탄 실험은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에 막대한 후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특히 이번 실험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핵능력을 외부에 과시한 것으로서 국제사회는 이전과 차원이 다른 위기감을 가지고 이번 사태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도출된 안보리 결의 2094호는 이미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자동적으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소위 트리거(trigger·안보리의 자동 개입을 의미)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보다 북핵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도 이전 북한의 도발사례보다 적극적으로 제재 논의에 동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북한은 세 차례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로 안보리 결의 1718·1874·2087·2094호 등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제재를 받아왔다.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의심물자의 이동을 막는 금수·검색·차단과 북한의 돈줄을 죄는 금융제재, 북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자산동결, 여행금지 등이 주 내용이다.

2013년 안보리 결의 2094호는 기존에 임의조치였던 의심화물 검색을 의무화하고 의심 품목 금수 조치와 관련해 ‘모두 잡는다’는 뜻의 ‘캐치올’ 방식을 적용하는 등의 촘촘한 대북제재를 가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실험에 대응하는 안보리의 제재 논의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새로운 형태의 도발이라는 점에서 실효적인 추가 제재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러시아 등 안보리 구성원들간의 논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제재 결의를 채택하기까지는 통상 다소 시간이 걸린다. 결의 채택까지 2006년 1차 핵실험 때는 5일(1718호), 2009년 2차 핵실험 때는 18일(1874호), 2013년 3차 핵실험 때는 총 23일(2094호)이 소요됐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軍·정보당국 ‘깜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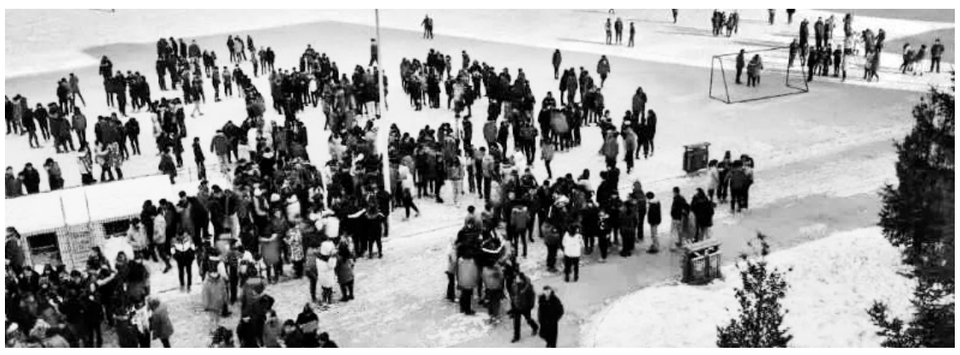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6일 전격적으로 단행한 4차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당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핵실험으로 또다시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군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감행한 핵실험을 사전에 준비하는 작업을 외부에 철저히 노출하지 않고 은밀하게 진행했다. 그간 1~3차 핵실험 때는 사전에 파놓은 갱도를 되메우기 작업을 하거나 갱도 안의 핵폭탄이 정상적으로 핵융합 반응을 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계측장비를 갱도 안에 반입했다. 갱도 안에 반입한 계측장비는 지상의 통제소와 연결하는 케이블이 설치되기 때문에 미국의 첩보위성에 그대로 노출됐다.

하지만, 이번 4차 핵실험은 이런 징후들이 전혀 식별되지 않았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북한이 한미 감시망을 철저히 따돌리고 은밀하게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면 최소 1개월 전에는 파악할 수 있다던 군의 장담이 허언이 되고 만 것이다.

국방부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가 지난 3일 북한이 수소폭탄의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을 실험할 가능성을 예견한 자료를 냈을 때도 신빙성이 낮다고 깎아내리기 바빴다.

결과적으로 군은 북한이 사전에 핵실험 준비 작업을 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후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6일 핵실험으로 지진이 발생하자 북중 접경지역인 옌지의 학생들이 진동에 놀라 수업 중에 운동장으로 대피한 모습. 〈중국 CCTV 트위터 캡처〉

민통선·안보관광지…접경지는 ‘차분’

북한이 수소탄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한 6일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서부전선 접경지역에 있는 안보관광지는 모두 정상 운영됐고,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에도 이동 자제 권고 등 비상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민통선 내 마을 주민들은 북측의 수소탄 실험 소식에 우려를 감추지는 않았지만 평소대로 차분한 생활을 유지했다. 파주 대성동마을 김동구 이장은 “오전부터 주민 10여명이 마을 회관에 모여 TV뉴스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 소식 등을 접하고 있다”며 “주민들 모두가 큰 동요도 없고, 군부대 통제도 없어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47가구 202명이 사는 대성동마을은 최북단 민간인 거주지역으로, 북한의 도발 때마다 주목을 받는 곳이다.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에는 오전 9시를 넘어서며 관광객들이 찾았고 도라산전망대~제3땅굴~임진각을 잇는 안보관광 투어 코스에도 관광객들이 평소와 다름 없이 방문, 북녘땅을 살폈다. /연합뉴스

아픈 것도 서러운데…

광주·전남 의료서비스 전국 최하위권

광주·전남 주민들이 수도권이나 울산 등 타 시·도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2015 한국의료 질 보고서’에 따르면 질적인 측면에서 최하위권인 광주(43.7점)는 적시성과 환자 중심성에서, 전남(49.2점)은 효율성과 의료 연계에서 각각 최하점을 받았다.

반면 울산은 의료 질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68.0점을 받아 광역 시·도 중 가장 첫 번째로 꼽혔다. 서울이 67.3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부산은 67.2점으로 세 번째로 좋은 평가를 얻었다. 울산은 환자 안전(91.3점·1위), 적시성(100점·1위), 의료접근도(100점·1위) 범주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 점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서울은 효율성(75.9점·2위), 환자 안전(81.9점·4위), 적시성(95.9점·4위), 환자중심성(83.5점·4위) 등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점수를 얻었다. 제주(49.5점) 역시 시스템 인프라, 효과성, 의료연계, 환자중심성, 효율성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고, 충남(49.3점)은 의료접근도, 환자안전, 효율성에서 점수가 깎였다.

보고서는 “하위권에 있는 지역들은 수도권에서 멀고 지역이 흩어져 있는 곳이거나 충남처럼 수도권에 인접해 있어 환자 유출이 많은 곳”이라며 “지역별 강점 영역과 취약 영역을 지역사회 단위 의료 질 향상 전략 추진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6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공고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 라 한다)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 관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1. 지원규모 : 융자사업비 총 350억원
○ (정부)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차입금 : 20억원
○ (공단)대체산업융자준비금 : 330억원
※ 추경 및 불용예산 발생시 당해연도 신청업체를 기준으로 우선지원하며, 더 이상의 지원업체가 없을시에는 추가 공고를 통하여 접수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제조업, 광업(석탄제외), 관광레저업, 문화콘텐츠 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창업·확장·이전기업
–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입주하는 기업
※ 1.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및 대출약정 체결가능 기업
2. 창업 및 이전기업은 사업개시 및 이전한 날로부터 7년 미경과 기업
○ 지원내용

융자구분	지 원 내 용
시설자금	계획시설의 설계 및 건물, 구조물, 구축물, 시설, 장비 등 자산의 구입·설치 자금 (제세공과금, VAT 등 제외) (※ 건물·토지 매입비용 및 경매비용은 지원 불가)
운전자금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 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연구개발비 포함)

3. 지원조건

구 분	기간(거치/상환)	융자한도액	융자비율	대출금리
시설자금	5년/5년	50억원	소요자금의 80% 이내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16.1분기 현재 1.75%)
운전자금	2년/3년	7억원	소요자금의 100% 이내	

※ 1. 시설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조정함
2. 운전자금은 '15년도 매출액의 1/4 이내로 지원하며, 미상환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3. 대출원리금 상환은 분기별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함

4. 신청절차
○ 신청서류 : 공단 홈페이지(http://www.mireco.or.kr) '공지사항' 에서 다운
– 대체산업융자금 지원신청서 3부 (해당 도 1부, 시·군 1부, 공단 1부)
– 제출서류 및 개인신용정보동의서 등
○ 신청기간 : 2016. 1. 4(월) ~ 2016. 2. 15(월)
○ 접 수 처 : 해당 시·군 담당부서

5. 기타사항
○ 지원대상 업종 중 '문화콘텐츠산업' 의 세부업종은 공단 홈페이지 참고
○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육성계획(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09호, '14.10.29)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역진흥실 또는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

말하는 법 1%만 바꿔도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며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면접준비실전과정
면접 준비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찰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춤 지원합니다.
★각 분야별 강사 파견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